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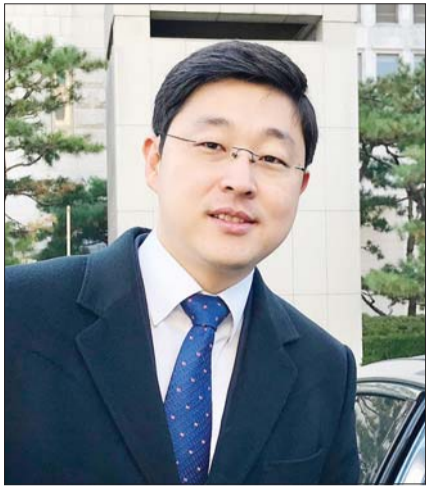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안돼”... 대체복무 마련 시급

대법원, 유죄 선고 원심 파기
“공동체, 다룰 수 있는 자유 인정”

양심과 종교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와, 관련 심사 기준과 대체복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오씨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2013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자신의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선고를 듣고 귀가하고 있다. /이법종 기자

상고했다.

◆대법 “양심=병역거부 사유” 파기환송

사건의 쟁점은 양심이나 종교가 병역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

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소집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 해당된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옹고 그릇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양심은 어떤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과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가 형사처벌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의무를 이행시키는 행위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내면의 양심을 국가가 불러내 형사처벌에 직면케 하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의 근거가 되는 양심의 판단 기준을 '전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규정했다.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병역 거부자의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 등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출한 관련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검사가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다룰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대체복무 마련 '진통' 예상

반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에 대한 참회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유럽과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다르다는 점, 양

심적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날 선고 직후 오씨는 “지난 세월 2만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내 덕분에 오늘의 판결이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관련 판결들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이날 선고를 반기는 한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는 법원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합숙 대체복무 36개월’로 알려진 정부안에 반대 성명을 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여론을 살펴야 하겠지만, 소수자는 평균에 있지 않다”며 “정부는 다른 소수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제할 의무가 있다. 정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법종 기자 jaker@metroseoul.co.kr

‘쌀 한가마니’ 18만8192원 목표값 산정

(80kg)

농식품부, 2022년산 까지 적용
국회에 변경 동의요청서 제출

정부가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산출한 18만8192원/80kg을 차기 목표가격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른 18만8192원/80kg으로 하되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쌀 목표가격 선정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 시에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고정직불제(농농업)와 변동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연간 1조1611억 원이 지급돼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쌀 직불금은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농촌 사회의 구조변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쌀 생산과잉 및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보전 기능 미흡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며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쌀 소비자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온라인으로 쌀을 사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터넷 쇼핑 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개월간 쌀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증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31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8)' 개막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국민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김종갑 한전 사장, 국회주도 개편 요청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산업용 경부하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31일 광주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에너지 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 국회가 전기 용도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요금체계가 될지 생각해서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게 내년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며 “국회에서 원자력이나 재생이나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는 무성한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문제, 수요 측면도 같이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줄었지만 한국은 41%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만큼 쓰는 것은 과하다”며 “한전의 수입을 중립적으로 하더라도 지금의 소비 왜곡은 고치는 게 맞다”며 한전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해결하려고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 “올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에 한전과 발전사들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는 비상경영을 하고 있고 대략 2조5000억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실적 전망을 얘기하는 것은 상장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계속 비용을 줄이도록 아껴 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한전 재무구조에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점점 가면서 재생에너지 원가는 세계 어떤 나라의 연구결과에서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며 “배출 비용을 내가 부담하지 않고 국민이 전기할 때의 수익성과 배출당사자가 부담할 때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전원이 사회·환경 비용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보다 절대 싸지 않다는 의미다.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발전 자회사가 잘하는 것은 맡겨두는 게 맞다”면서도 “대규모 계획개발은 한전의 계통 운영 경험 등을 봐서 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사우디 원전사업에 대해 “당초보다 일정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사우디가 내년 말까지는 한 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ujim6326@

아임쇼핑 → 공영쇼핑 재탄생

공영홈쇼핑, TV·인터넷 등에 적용



공영홈쇼핑은 기존의 '아임쇼핑'을 '공영쇼핑'으로 바꾼다고 1일 밝혔다. 새 이름은 이날부터 전면 적용한다.

글자 개발에는 '안상수체'를 만든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 전 흥익대 교수가 재능 기부로 참여했다. 초성·중성·종성의 적절한 배치 및 여백 효과로 시각적 효과를 높이면서 세련미를 줬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판로로서의 공영쇼핑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디자인은 각 글자가 담긴 '4개의 사각형'과 각 글자(사각형) 사이에 놓인 '3개의 끈'이 핵심이다.

4개의 사각형은 판로가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및 농어업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폭넓게 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공영홈쇼핑이 TV홈쇼핑의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고 혁신 및 아이디어 상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조력자가 되겠다는 취지다.

3개의 끈은 국내 유일한 공공의 홈쇼핑으로서 '책임' '공정' '신뢰'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책임을 인식하고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영쇼핑이 되겠다는 의미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공영홈쇼핑은 1일부터 TV홈쇼핑 방송 화면과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쇼핑물 로고 등에 새 이름을 전면 적용한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공영홈쇼핑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상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는 협력사의 상생 동반자가 되기 위해 탄생했다”며 “새로운 디자인이 명확해진 기관 정체성을 기반으로 공영홈쇼핑이 제 역할을 다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절충교역 국내상담회 진행 중진공, 참여기업 7일까지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절충교역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위해 '절충교역 국내상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을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절충교역'이란 국외업체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할 때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이번 상담회는 방위사업청과 협업을 통해 이달 29~30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상담회에는 록히드 마틴과 GE 등 국외업체 5개사가 초청됐으며, 항공, 미사일 관련 바이어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생산 활동이 50% 이상이며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 또는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폐업 기업이거나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와 기존에 계약 혹은 거래 중인 품목이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김승호 기자